

‘코로나19’ 100일 광주·전남 선방했다

발빠른 대처로 발생률 최저

지난 1월 20일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이후 28일로 꼭 100일째 됐다. 광주·전남지역민들은 3개월이 넘는 긴 시간 동안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도 나눔과 연대의 정신으로 뚝뚝 뚝뚝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50일째 지역사회 감염 제로’와, 인구 대비 가장 낮은 발생률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정부 조치보다 한 단계 앞선 광주시와 전남도의 고강도 방역 시스템, 그리고 생활 속 방역지침을 충실히 준수해 온 높은 시민의식이 결합한 결과물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코로나19가 전국을 덮친 위급한 상황에서도,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의 아픔을 함께 나누기 위해 부족한 병상까지 나눠준 광주·전남의 ‘병상 연대’는 전국에 깊은 울림을 주기도 했다.

◇광주시, 한발 빠른 대처 전국 모범이다
=국내 첫 확진자는 1월 20일 발생했다.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들어온 중국인 여성이었다. 이후 2주일 만인 지난 2월 3일 광주·전남에서도 태국여행을 다녀온 A(여·42·광주시)씨가 지역 내 첫 확진 판정을 받

았다. 3월 8일까지 광주에선 대구를 방문한 신천지 신도와 해외 여행자 등 총 15명이 지역사회 감염으로 확진자가 됐다.

광주시는 첫 확진자 발생 후 곧바로 정부보다 한 단계 높은 대응 시스템을 유지해 추가 감염자를 최소화했다. 시는 또 대구 신천지발 확진자가 발생하자, 신천지측의 자발적 협조를 유도해 초기에 확진자 7명을 찾아내 격리 조치했다. 이는 대규모 지역사회 감염을 막아내는 결정적 요인이 됐다.

시는 또 전국 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전문 의료진이 대거 참여하는 민관공동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선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한 덕분에 정부로부터 모범적인 방역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호평도 받았다.

위기일 때 더 빛을 내는 광주시민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코로나19를 막아내는 데 큰 힘이 됐다. 광주에선 지난 3월 8일 이후 50일째 지역사회 감염이 단 한건도 없다. 이날 현재 광주지역 누적 확진자는 모두 30명으로, 지난달 8일 이후 발생한 15명은 모두 해외 유입자이거나 관련자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섬 지역인 제주도를 제외하면 유일하다. ▶2면으로 계속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5·18 40주년 ... 전두환, 사죄는 없었다

27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형사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한 전두환씨가 재판이 끝난 뒤 귀기하기 위해 차량에 오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법정서 “헬기사격 난 모른다” 또 부인 ... 검찰에 책임 떠넘기기 ‘적반하장’도

5월단체·시민들 분통

“5·18역사왜곡처벌법 제정
추징금 환수 미루지 말라”

전두환(89)씨가 법정에서 또 다시 헬기 사격 사실을 부인했다. 국회와 검찰에 책임을 떠넘기기까지 했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진상규명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지난 1995년 검찰이 확인할 수 없었다고 했던 헬기 사격을 다시 주장하고 있다는 식의 논리까지 들먹였다. <관련기사 3·6·20면>
전씨 재판을 계기로 정부와 21대 국회가 5·18 역사왜곡처벌법 제정과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속한 가동을 통한 ‘완전한 진상 규명’과 추징금 환수 등을 더 이상 미루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지역민들은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 전문에 5·18정신을 담겠다”는 약속을 실

천하도록 충선을 통해 여당에 힘을 실어준 점을 감안, 정부와 여당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관련기사 3·6·20면>

전씨는 27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형사 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당시 헬기에서 사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했다. 그는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명을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기소된 데 대해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전씨는 이날 인정신문을 마친 뒤 눈을 감고 있다가 검사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재판장 질문에 눈을 뜨고 “만약에 헬기에서 사격했다더라면 많은 희생이 있었을 것”이라며 “그런 무모한 헬기 사격을 대한민국의 아들이 헬기 사격수 중위나 대위가 하지 않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씨 변호인은 이어 고(故) 조비오 신부의 5·18 기간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이 부당하다고 재차 주장했다. 20대 국회의 진

상규명 특별법에 따른 헬기 사격에 대한 진상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이 기소했다며 위법하다는 주장까지 내놓았다.

5월 단체와 지역민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분통을 터트렸다.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의 계엄군 헬기사격 확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과 전일빌딩 헬기기종 사격 흔적 등 ‘80년 5월 광주’의 진실을 확인할 증언·증거들이 차고 넘치는데도, 40년 전 5월에 학살된 사람들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커녕 진실을 밝히는 데 눈을 감고 귀를 닫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다.

정치권에 대한 비판도 터져나왔다. 진상규명 특별법이 시행됐음에도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조비오 신부를 ‘거짓말쟁이’로 비난한 전씨의 거짓말, 극우 세력의 허위 주장 등으로 왜곡됐던 진실을 밝히는 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을 확실한 발표명령자가 누구인지, 암매장 여부 등은 여전히 미궁 속에 있다. 지역민들은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는 울해, 충력을 쏟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는데다, 국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여당이 압승한 만큼 미뤄왔던 ‘5·18 역사왜곡 처벌법’을 제정하고 완전한 진상 규명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18기념식에서 약속했던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도 실천, 더 이상 5·18이 흔들리지 않고 모두가 공감하는 역사로 남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지역민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형 일자리 사업’ 정상화 단초 마련

노동계, 일자리재단 긍정 반응

노동계 불참 선언으로 좌초위기를 맞았던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정상화를 위한 단초를 마련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제안한 가장 ‘광주상생일자리재단’ 설립에 대해 노동계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이다. <관련기사 3면>

이용섭 광주시장과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의장은 27일 오후 한국노총 광주본부에서 면담하고 가장 광주 상생일자리 재단 설립 방안을 논의했다.

이 시장과 윤 의장은 30여분간 진행된 비공개 대화에서 재단 설립 취지에 공감하고 조직 설립·구성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 시장은 면담 후 “광주시가 지역사회에 제안한 상생 일자리 재단을 만드는 것은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에서 제안한 내용과 방향성이 부합한다는 점을 의

장이 인정했다”며 “재단 단장은 노동계에서 추천하고 사무국장은 공무원이 아닌 개방형 4급으로 선임하는 방안에 동의했다. 재단 설립 업무를 위한 설립 준비팀과 노사상생일자리재단을 위한 상생지원팀을 두는 데도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시장의 이 같은 제안에 대해 윤 의장이 즉답 대신 내부 논의 및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의 최종 입장을 광주시에 추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광주시의 설명이다.

윤 의장은 이날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재단에 대한 설명을 들었지만 아직 답변할 단계는 아니다. 내부 논의도 거치고 여러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논의 결과가 나오면 시에 통보하겠다”며 “시간이 필요하고 당장 답변하기에는 빠르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지금은 마음의 손을 잡을 때

함께 손잡고 건넌
일상의 소중함을 이제서야 배웁니다

사회적 거리는 멀어졌지만
서로를 걱정하고 배려하는
국민 모두의 마음이 있기에
우리는 분명,
이 힘든 시간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따뜻한 마음의 손을 맞잡은 국민 모두가
대한민국의 힘입니다

한국전력 KEPCO



사랑과 감사의 66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 ~ 2020]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